 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발 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문 의	배경내 공동집행위원장 주리 공동집행위원장
	제 목	88주년 학생의 날 맞이, “청소년의 빼앗긴 존엄과 민주주의, 이제 국회가 답할 때!” - 전국 청소년 인권 실태의식 조사 결과 발표 및 입법 촉구 기자회견 후속 보도자료

[88주년 학생의날 맞이]

“청소년의 빼앗긴 존엄과 민주주의, 이제 국회가 답할 때!”
전국 청소년 인권실태·의식 조사결과 발표 및 입법 촉구 기자회견

주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박주민 · 심상정 · 유은혜 의원실
 일시 :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40분 (소요시간 약2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순 서>

사회 :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 ▶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그래픽차트 활용): 주리, 공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 청소년 당사자 발언 : 청소년참정권과 학내 민주주의 보장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 김윤송(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 ▶ 다짐 발언: 박주민, 유은혜 의원

<2017 전국 청소년인권 실태·의식 조사 결과> 및 청소년 당사자 발언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개 첨부

아름다운재단의 2017 변화의 시나리오로 지원되었습니다..

청소년 당사자 발언문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김운송)

저는 지난 박근혜정권 퇴진운동에서 함께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이뤄낸 탄핵으로 치러진 촛불대선에서, 저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으니 청소년은 2등시민인 것처럼 취급되고, 학교 안에서도 제대로 인간 대우를 못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경험한 학교는 인권침해가 일상 그 자체인 공간이었습니다. 두발복장 규제와 휴대전화 압수는 물론이고, 급식을 교사가 정한 시간 안에 다 먹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을 때렸습니다. 매일 먹게 하는 우유도 50초 안에 먹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청소년들이 겪어내고 있는 인권침해와 고통이 숫자로 표현되었지만, 저와 같은 청소년, 제 친구들에게 인권침해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만 18세는 청소년의 너무 작은 일부이기 때문에,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치의 장에서 대변되기 어렵습니다. 국회는 조속히 최대한 선거연령을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고, 저와 같은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에서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시길 요구합니다.

2017 전국 청소년인권 실태·의식 조사 결과 요약

-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혁명” 이후 (2017년) 시민·민간 단위에서 진행한 전국 차원 청소년인권 실태 조사
 - ▶ 전국 중고등학생 연령대 청소년(탈학교 청소년 포함) 2,420명 조사 참여.
 - ▶ 조사 참여자 중 중학생 40.6%, 일반고교생 41.1%, 특성화고교생 16.5%, 탈학교 청소년 1.8% 차지.
 - ▶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참여 경험, 학생인권 침해, 노동 인권 침해, 학교 밖 시설 이용 경험, 주요 폭력 가해자 등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여, 한국 사회와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조사도 함께 실시함.

- “청소년 2명 중 1명, 박근혜 퇴진 운동 참여” : 청소년 참정권 보장되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거라고 다수가 답해
 - ▶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정국 당시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은 44.6%로, 절반 이상의 청소년이 정권 퇴진 운동에 참여했다고 응답했음. 28%는 집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고, 20.7%는 온라인을 통해 정치적 의견을 표명했으며,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선언에 서명한 경우는 36.3%에 달함. 청소년 2명 중 1명 이상이 대통령 퇴진이라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거나 행동에 나선 것임.
 - ▶ 그러나 청소년 중 교사나 어른에게 자기 의견을 말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된다는 응답이 61.2%에 달했으며, 학교에서 정치적·사회적 현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또는 가끔

있다는 응답은 34.4%에 불과하여 청소년의 정치의식은 높으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토론의 기회는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드러냄.

- ▶ 한편 청소년 중 84.4%는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한 자신의 관심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학교는 여전히 유신 시대” : 학내 교사에 의한 체벌과 언어폭력 높게 나타나

- ▶ 체벌 금지가 법제화되었음에도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체벌에 노출된 청소년이 35.7%에 달했으며, 교사에 의해 욕설 등 언어폭력에 노출된 경우도 40.6%로 나타남. 중고등학생 3명 중 1명 이상(1년 이내에 탈학교한 청소년 포함)이 교사에 의한 학내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임.
- ▶ 체벌의 경우 지난 1년간 일반고교생은 35.3%가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했고, 특성화고교생은 23.1%가 그렇게 답했지만, 중학생의 경우 무려 40.5%가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했음(1년 이내에 탈학교한 청소년 포함). 억압적이고 반인권적인 학교의 규율과 문화에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중학생들에게 규율을 강제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더 동원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또한 더 나이가 적기에 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
- ▶ 한편 교사에 의한 체벌과 폭언은 국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됨. 국공립학교에서는 31.1%의 중고등학생이 체벌이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했고, 38.7%의 중고등학생이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이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했으나, 사립학교의 경우 체벌은 46.1%, 폭언은 48.8%로 나타남(1년 이내에 탈학교한 청소년 포함).
- ▶ 최근 1년 간 청소년 자신에게 폭행, 언어폭력 등을 가한 폭력 가해자의 유형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33.8%가 교직원에게 이러한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해서 1위로 나타남. 이는 ‘동급생 및 선후배’가 가한 경우(21.1%)보다 더 높은 수치였음. 학생 간의 폭력 만큼이나 교사에 의한 폭력을 근절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한편 폭력 가해자로 응답자의 13.8%는 ‘보호자’를, 12.2%는 ‘낯선 사람’을, 8.4%는 ‘학원강사’를 꼽았음. 심지어 ‘경찰’이 폭력 가해자인 적이 있다고 답한 경우도 1.1%로 존재하였음(폭력 경험이 없다고 답한 청소년은 47.3%).
- ▶ 두발 등 용의 복장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최근 1년간 자주 또는 가끔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도 71%였으며, 휴대전화 금지 및 압수가 자주 또는 가끔 있었다는 응답 또한 58.3%로 나타남. 정규교과가 아닌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제로 시키는 행위 역시 일반고교생 중 55.8%가 자주 또는 가끔 경험하였음(1년 이내에 탈학교한 청소년 포함).

□ “이게 나라냐” - 청소년 중 다수가 한국 사회가 청소년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심한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믿고 도움을 요청할 만한 기관은 ‘없다’고 답해

- ▶ 학내에서 중고등학생 중 다수가 폭력 등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으나,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테니까 참는다’는 응답이 42.9%로 높게 나타남. ‘방법을 몰라 해결할 기회를 놓친다’는 응답도 15%에 달해 과반 이상의 중고등학생이 인권침해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현실임(1년 이내에 탈학교한 청소년 포함).
- ▶ 한편 ‘내가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기관이 있다’는 문장에 동의한 청소년은 43.9%에 불과해, 청소년 2명 중 1명 이상은 인권침해를 당해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음.
- ▶ 한국 사회가 청소년에 대한 무시와 차별, 폭력이 심한 나라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33.1%의 청소년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34.9%는 ‘조금 그렇다’고 응답함.
- ▶ 90.5%의 청소년이 ‘청소년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음.

□ “청소년에게 모든 공간이 인권침해의 장” - 노동경험 있는 청소년 중 78%가 노동권·인권침해 경험, 쉼터 등 시설 이용 경험 청소년 세 명 중 두 명이 시설 이용에서 인권침해 경험해

- ▶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등 노동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 중에서는 78.0%가 임금체불이나 폭력,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남. 일터에서의 폭행 및 폭언(24.8%), 성희롱 등 성폭력(25.1%)을 경험한 비율이 4명 중 1명 꼴로 높게 나타남.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50.9%)가 과반이 넘고, 임금이 체불된 경우(35.2%), 최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을 주는 경우(31.4%), 산재를 경험한 경우(37.2%),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을 통보받은 경우(30.4%)도 대략 3명 중 1명 꼴로 나타남.
- ▶ 쉼터, 학교밖지원센터, 대안학교 등 정규학교 외의 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중 용의복장 규제(42.4%), 차별적 대우(43.1%), 휴대전화규제(45.1%)를 경험한 비율이 모두 40%를 훌쩍 넘김. 폭행과 폭언 등 폭력(30.6%) 및 성희롱 등 성폭력(30.7%)을 경험한 경우도 30%가 넘고, 정체성이나 행적 등을 이유로 이용을 거부당한 경우(31.9%) 및 개인정보 유출(34.7%)을 경험한 경우도 3명 중 1명 꼴로 나타남.
- ▶ 청소년 중 ‘낯선 사람’으로부터 폭행 및 폭언 등 폭력을 당한 비율이 12.2%이라는 것은, 청소년에게는 길거리 등 공공장소 또한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라는 의미임. 학교에서의 인권만이 아니라 일터와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서 전반적인 청소년인권 현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참정권 보장과 학생인권법 및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을 통해, 청소년의 삶에 최소한의 존중과 존엄을 보장해야

- ▶ 청소년 2명 중 1명이 박근혜 퇴진 운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했다는 점은 청소년의 높은 정치의식을 드러내는 대목임. 선거권 제한 연령을 대폭 하향하고 정당 가입 연령제한 등을 폐지하여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함.
- ▶ 체벌금지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생 3명 중 1명이 체벌에 노출되어 있음(1년 이내에 탈학교한 청소년 포함).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두발 및 용의복장 단속과 강제 보충수업 등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역에만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이상의 조치가 요구됨.
- ▶ 사립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체벌, 폭언 및 두발복장에 관한 단속과 규제, 정규교과 외 수업과 학습의 강제, 휴대전화 관련 금지와 압수 등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사립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비율이 높다는 것은 개별 시·도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뜻함. 현재 선언적인 조항 하나로만 학생의 인권 보장이 규정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법(제 18조의 4)을 개정하여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 차원으로 보장하고 정부에서 학생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해야 함.
- ▶ 학생생활규정, 급식 등에 관해 학생의 의견이 무시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나타남.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학생회나 학급회의 등을 통해 건의하는 비율도 매우 낮아 학내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함. 학교 운영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고 학생과 관련한 사안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학생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법제화 및 학내 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등 노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일터에서의 폭력 등 인권과 노동권의 침해를 경험한 비율이 78%로 높게 나타났으며, 쉼터, 학교밖지원센터, 대안학교 등 정규학교 외의 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중 부당한 이용 거부를 비롯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비율도 세 명 중 두 명 꼴로 높게 나타남.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했다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아, 학교 뿐 아니라 일터, 시설, 공공장소 등 우리 사회 전반이 청소년에게 안전하지 못한 공간이며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남. 학교 안에서의 학생인권 개선을 위한 대책 뿐 아니라 일터, 시설, 공공장소 등 청소년이 존재하는 공간 전반에서 청소년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이 시급함.

<2017 전국 청소년인권 실태·의식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17.10.10 ~ '17.10.20

○ 조사 주관 :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조사 협력 : 전교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조사대상 및 방법

- (1) 면대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17.10.10 ~ '17.10.20)
- (2) 온라인 자기기입식 설문조사('17.10.11 ~ '17.10.20)

○ 주요 조사 내용

중·고교 내에서의 폭력 등 청소년인권 침해 실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당시 참여 경험 여부, 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청소년의 의식 등에 관한 조사

○ 응답자 구성

		응답자 수	%
전체		2420	100%
학교	중학교	978	40.4%
	일반고교	989	40.9%
	특성화고교	398	16.4%
	학교에 다니지 않음	44	1.8%
	무응답	11	0.5%
집단합계		2420	100%
학교종류	국공립	1678	69.3%
	사립	676	27.9%
	학교에 다니지 않음	43	1.8%
	무응답	23	1%
집단합계		2420	100%
성별	남성	881	36.4%
	여성	1489	61.5%
	기타	37	1.5%
	무응답	13	0.5%
집단합계		2420	100%
지역	강원	128	5.3%
	경기	280	11.6%
	경남	169	7.0%
	경북	95	3.9%
	광주	65	2.7%
	대구	98	4.0%
	대전	89	3.7%
	부산	104	4.3%
	서울	288	11.9%
	세종	2	0.1%
	울산	187	7.7%
	인천	228	9.4%
	전남	109	4.5%

전북	191	7.9%
제주	59	2.4%
충남	220	9.1%
충북	96	4.0%
무응답	12	0.5%
집단합계	2420	100%

<2017 전국 청소년인권 실태·의식 조사 결과>

박근혜 퇴진 운동 적극 참여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운동 당시 무엇을 하셨나요? (복수 응답)

※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 수는 2287명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거리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다	모임을 만들거나 참여했다	전단지 나눠주거나 벽보를 붙였다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에 글을 썼다	선언, 서명에 참여했다	언론에 글 쓰거나 인터뷰를 했다	기타
빈도	1020	640	87	45	474	830	56	50
응답자 중 백분율	44.6%	28.0%	3.8%	2.0%	20.7%	36.3%	2.4%	2.2%

이번 조사에서는 2016년 10월 말부터 전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 정국 당시 청소년의 참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참여 유형을 제시하고 참여 여부를 물었다. 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답한 것은 응답자의 44.6%로, 절반 이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중 28.0%는 집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고, 20.7%는 온라인을 통해 정치적 의견을 표명했으며,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선언에 서명한 경우는 36.3%에 달했다. 응답자 중에는 관련 모임에 참여했다는 비율이 3.8%, 언론에 글을 쓰거나 인터뷰를 한 비율이 2.4%로 더 적극적인 참여자도 적지만 존재했다. 기타 응답으로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건에 대해 알렸다”, “친구들과 토론했다”, “집에서 소등 시위에 참여했다”, “관련 뉴스를 찾아보고 모았다”, “SNS로 글을 공유했다” 등이 있었다.

전 국민의 1/3 정도가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 집회 참여 경험이 있다는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청소년들도 이에 못지 않게 집회에 참여했으며 집회 참여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의견을 표현하고 행동했음을 보여 준다. 청소년들이 참정권을 제한당하고 경제적 제약이 크며 사회적 여건도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더욱 의미 있는 참여 수치이다.

이처럼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활발했지만,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정치적 주제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 주제들에 대해 정보를 알고 교사나 친구들과 함께 토론할 기회가 있었는지’ 물었을 때, 학교생활 외에 정치적 현안이나 교육 정책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가 없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 주제들에 대해 정보를 알고

교사나 친구들과 함께 토론할 기회가 있었나요?

: 정치적·사회적 사건이나 주요 현안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	-------	-------	-------	----

빈도	177	646	833	733	2390
백분율	7.4%	27.0%	34.9%	30.7%	100%

1년 내 학교에서 정치적·사회적 사안에 관한 토론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자주 있다’는 응답은 7.4%밖에 안 되었다. ‘가끔 있다’고 응답한 것과 합쳐도 총 34.4%만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혀 없다’고 답한 비율도 30.7%에 달했다. 절반이 넘는 청소년이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점과 비교해볼 때 청소년의 실제 정치 의식과 학교 현장의 실태는 간극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진행 중인 정치적 격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던 기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학교에서는 정치적 현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기회도 별로 없었던 것이다.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 주제들에 대해 정보를 알고
교사나 친구들과 함께 토론할 기회가 있었나요?**

: 교육 정책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빈도	160	590	872	765	2388
백분율	6.7%	24.7%	36.5%	32%	100%

정치적 사안 중에서도 교육 정책은 학생이 당사자이고 학교가 큰 영향을 받는 문제이다. 따라서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토론할 기회가 있었는지 따로 물었다. 조사 결과로는 교육 정책에 관한 토론은 정치적·사회적 사안에 대한 토론과 거의 비슷한 양상이었고 오히려 근소하게 적게 나타났다. 6.7%만이 교육 정책에 대해 토론할 기회가 ‘자주 있다’고 답했고, ‘가끔 있다’고 응답한 것과 합산해도 31.4%만이 교육정책에 관한 토론을 할 기회가 있었다고 답했다.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 주제들에 대해 정보를 알고
교사나 친구들과 함께 토론할 기회가 있었나요?**

: 학생생활규정 등 학교생활에 관한 문제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빈도	335	895	694	464	2388
백분율	14%	37.5%	29.1%	19.4%	100%

학생생활규정 및 학교생활과 관련해 학내에서 토론할 기회가 있다는 응답은 정치적 현안이나 교육 정책에 비해서는 좀 더 많았다. 절반 정도의 응답자는 자주 또는 가끔 학교생활에 대해 토론할 기회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그럴 기회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것도 19.4%에 이르고, 응답자 중 대략 3명 중 1명은 자신이 당사자임에도 자신에게 적용되는 규칙 및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사안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대통령 탄핵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나섰지만, 정작 학교 안에서는 토론의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내 교사에 의한 체벌과 언어폭력 등 여전히 높게 나타나

대표적 학생인권 침해 문제들에 관해서 조사 참여 응답자들에게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얼마나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셨나요?”라고 질문하였다.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얼마나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셨나요?
: 교사에 의한 체벌 (손발이나 도구로 때리기 또는 앉았다 일어서기, 오리걸음, 엎드려뺨쳐, 손들고 서있기 등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벌)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빈도	255	598	609	930	2392
백분율	10.7%	25%	25.5%	38.9%	100%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체벌을 경험한 경우는 ‘자주 있다’가 10.7%, ‘가끔 있다’가 25%(합 35.7%)로 나타났다. 체벌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38.9%에 불과해, 교육 현장에 체벌이 근절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체벌 금지가 법제화된 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음에도 청소년 3명 중 1명 이상이 학내 체벌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얼마나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셨나요?
: 교사에 의한 체벌 (학교 종류별)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국공립	빈도	151	369	441	710	1671
	백분율	9.0%	22.1%	26.4%	42.5%	100.0%
사립	빈도	97	214	160	204	675
	백분율	14.4%	31.7%	23.7%	30.2%	10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빈도	5	9	1	8	23
	백분율	21.7%	39.1%	4.3%	34.8%	100.0%
		253	592	602	922	2369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얼마나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셨나요?
: 교사에 의한 체벌 (학교급별)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중학교	빈도	127	268	240	341	976
	백분율	13.0%	27.5%	24.6%	34.9%	100.0%
일반고	빈도	89	259	269	369	986
	백분율	9.0%	26.3%	27.3%	37.4%	100.0%
특성화고	빈도	33	58	95	209	395
	백분율	8.4%	14.7%	24.1%	52.9%	10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빈도	6	9	1	8	24
	백분율	25.0%	37.5%	4.2%	33.3%	100.0%

조사에서는 사립학교에서의 체벌 경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1년 내 체벌에 노출된 청소년이 31.1%였으나, 사립학교인 경우 46.1%에 달하였다. 공사립 모두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사립학교 내 체벌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일반고교생은 35.3%가 1년 내 체벌에 노출되었고, 특성화고교생은 23.1%가 노출되었지만, 중학생의 경우 무려 40.5%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보다 억압적이고 반인권적인 학교의 규율과 문화에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중학생들에게 규율을 강제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다수 동원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중학생이 더 나이가 적기 때문에 더 함부로 대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얼마나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셨나요?
: 교사에 의한 욕설 또는 모욕적인 말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빈도	244	725	696	722	2387
백분율	10.2%	30.4%	29.2%	30.2%	100%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욕설 등 폭언을 경험한 경우는 '자주 있다'가 10.2%, '가끔 있다'가 30.4%(합 40.6%)로 나타났다. '전혀 없다'는 응답은 30.2%에 불과하여, 응답자 중 약 70%가 학내에서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얼마나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셨나요?
: 교사에 의한 욕설 또는 모욕적인 말 (학교 종류별)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국공립	빈도	148	465	499	555	1667
	백분율	8.9%	27.9%	29.9%	33.3%	100.0%
사립	빈도	83	246	188	157	674
	백분율	12.3%	36.5%	27.9%	23.3%	10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빈도	11	6	2	4	23
	백분율	47.8%	26.1%	8.7%	17.4%	100.0%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얼마나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셨나요?
: 교사에 의한 욕설 또는 모욕적인 말 (학교급별)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중학교	빈도	89	286	290	306	971
	백분율	9.2%	29.5%	29.9%	31.5%	100.0%
일반고	빈도	115	334	286	250	985
	백분율	11.7%	33.9%	29.0%	25.4%	100.0%
특성화고	빈도	27	94	115	160	396
	백분율	6.8%	23.7%	29.0%	40.4%	10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빈도	12	7	2	3	24
	백분율	50.0%	29.2%	8.3%	12.5%	100.0%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얼마나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셨나요?
: 교사에 의한 욕설 또는 모욕적인 말 (성별별)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남성	빈도	77	210	262	321	870
	백분율	8.9%	24.1%	30.1%	36.9%	100.0%
여성	빈도	152	502	424	392	1470
	백분율	10.3%	34.1%	28.8%	26.7%	100.0%
기타	빈도	13	9	6	6	34
	백분율	38.2%	26.5%	17.6%	17.6%	100.0%

체벌과 마찬가지로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역시 사립학교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학교에서는 38.7%가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을 최근 1년 내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립학교의 경우 48.8%로 국공립학교에 비해 약 10%p 높게 나타났다.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의 경우 '자주 있다'와 '가끔 있다'는 응답을 합친 비율이 중학생 중 38.7%, 일반고교생 45.6%, 특성화고교생 30.5%로 나타나, 일반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입시경쟁이 심한 환경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경험은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 남학생의 경우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36.9%이나 여학생은 26.7%로 10%p 이상 차이가 났다. 이는 성별에 따라 언어폭력에 대한 민감함의 차이가 있거나, 여학생에 대해서는 성차별적 문화 속에서 모욕적인 언사가 더 많은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얼마나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셨나요?

: 머리카락, 옷, 화장 등 용의복장에 대한 규제와 단속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빈도	1169	532	355	339	2396
백분율	48.8%	22.2%	14.8%	14.1%	100%

최근 1년 내 학교에서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제와 단속을 자주 경험한 응답자가 48.8%로 절반에 이른다. '가끔 있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71%가 두발복장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얼마나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셨나요?

: 머리카락, 옷, 화장 등 용의복장에 대한 규제와 단속 (성별별)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남성	빈도	286	211	182	196	875
	백분율	32.7%	24.1%	20.8%	22.4%	100.0%
여성	빈도	855	315	165	138	1473
	백분율	58.0%	21.4%	11.2%	9.4%	100.0%
기타	빈도	24	3	4	3	34
	백분율	70.6%	8.8%	11.8%	8.8%	100.0%

두발 및 용의복장에 대한 학내 규제와 단속을 경험하는 비율에서는 성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남학생은 자주 경험하는 경우가 32.7%, 가끔 경험하는 경우가 24.1%였으나, 여학생은 58%가 자주, 21.4%가 가끔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남학생에 대한 규정은 단순한 데 비해, 여학생에 대해서는 화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용의에 대한 규정이 세세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얼마나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셨나요?

: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제로 하게 하는 것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빈도	563	381	533	910	2387
백분율	23.6%	16%	22.3%	38.1%	100%

전체 청소년 중 최근 1년 내 학교에서 정규교과 외 수업 및 학습 강요를 경험한 경우가 39.5%로 나타났다('자주 있다' 23.6%, '가끔 있다' 16%).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얼마나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셨나요?
: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제로 하게 하는 것 (학교 종류별)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국공립	빈도	316	223	392	737	1668
	백분율	18.9%	13.4%	23.5%	44.2%	100.0%
사립	빈도	234	146	135	158	673
	백분율	34.8%	21.7%	20.1%	23.5%	10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빈도	9	7	1	6	23
	백분율	39.1%	30.4%	4.3%	26.1%	100.0%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얼마나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셨나요?
: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제로 하게 하는 것 (학교급별)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중학교	빈도	128	116	243	485	972
	백분율	13.2%	11.9%	25.0%	49.9%	100.0%
일반고	빈도	353	197	191	244	985
	백분율	35.8%	20.0%	19.4%	24.8%	100.0%
특성화고	빈도	69	60	94	172	395
	백분율	17.5%	15.2%	23.8%	43.5%	10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빈도	11	7	1	5	24
	백분율	45.8%	29.2%	4.2%	20.8%	100.0%

정규교과 외 수업 및 학습 강요 또한 사립학교에서 더 높은 비율로 일어나고 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자주 있다’ 18.9%, ‘가끔 있다’ 13.4%였으나, 사립학교는 ‘자주 있다’ 34.8%, ‘가끔 있다’ 21.7%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고교생의 경우 무려 55.8%가 최근 1년 내 학교에서 정규교과 외 수업 및 학습 강요를 자주 또는 가끔 경험했다고 답하여, 중학생 및 특성화고교생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교육부 지침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입시경쟁 문화가 심한 환경에서 보충수업, 방과 후교실, 자율학습 참여를 강요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얼마나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셨나요?
: 수업시간 외에도 휴대전화를 금지하거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빈도		1101	293	348	650	2392
백분율		46.0%	12.2%	14.5%	27.2%	100%

응답자 중 수업시간 외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압수하는 것을 경험한 경우는 58.3%에 달했다(‘자주 있다’ 46%, ‘가끔 있다’ 12.2%). 실질적으로 수업 진행에 관련해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거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도 개선을 권고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46%, 거의 절반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수업시간 외에도 휴대전화를 금지하거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일이 자주 있다고 답한 것을 통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거나 휴대전화를 함부로 압수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얼마나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셨나요?
: 수업시간 외에도 휴대전화를 금지하거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 (학교 종류별)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국공립	빈도	737	175	257	505	1674
	백분율	44.0%	10.5%	15.4%	30.2%	100.0%
사립	빈도	342	110	83	137	672
	백분율	50.9%	16.4%	12.4%	20.4%	10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빈도	14	1	3	5	23
	백분율	60.9%	4.3%	13.0%	21.7%	100.0%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얼마나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셨나요?
: 수업시간 외에도 휴대전화를 금지하거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 (학교급별)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중학교	빈도	493	91	129	262	975
	백분율	50.6%	9.3%	13.2%	26.9%	100.0%
일반고	빈도	472	156	145	214	987
	백분율	47.8%	15.8%	14.7%	21.7%	100.0%
특성화고	빈도	115	42	69	169	395
	백분율	29.1%	10.6%	17.5%	42.8%	10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빈도	16	1	3	4	24
	백분율	66.7%	4.2%	12.5%	16.7%	100.0%

이 역시 사립학교에서 더 높은 비율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다. ‘자주 있다’는 응답과 ‘가끔 있다’는 응답을 합한 수치를 기준으로 볼 때, 국공립학교의 경우 54.5%, 사립학교의 경우는 67.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업시간 외에도 휴대전화를 금지하거나 압수하는 일은, 특성화고에 비해 일반고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학생 중 59.9%, 특성화고교생 중 39.7%, 일반고교생 중 63.6%가 최근 1년 내 휴대전화 금지나 압수를 자주 또는 가끔 경험하였다고 응답했다. 입시 공부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 일반고의 분위기상 휴대전화 통제 등을 더 강력하게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얼마나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셨나요?

: 성별, 학업성적, 외모, 가정형편,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출신국가, 출신지역, 학년(나이) 등에 따른 차별 대우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빈도		369	482	599	936	2389
백분율		15.4%	20.2%	25.1%	39.2%	100%

최근 1년간 학교 내에서 차별을 자주 경험한 응답자는 15.4%, 가끔 경험한 응답자는 20.2%로 나타났다. 학교 안에서 차별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치이다.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얼마나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셨나요?

: 성별, 학업성적, 외모, 가정형편,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출신국가, 출신지역, 학년(나이) 등에 따른 차별 대우 (성별별)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남성	빈도	88	123	186	470	2
	백분율	10.1%	14.2%	21.4%	54.1%	0.2%
여성	빈도	259	349	406	458	0
	백분율	17.6%	23.7%	27.6%	31.1%	0.0%
기타	빈도	19	7	6	2	0
	백분율	55.9%	20.6%	17.6%	5.9%	0.0%

학내 차별 경험에서는 성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24.3%가 차별이 자주 또는 가끔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나, 여학생은 자주 또는 가끔 있었다는 응답자 비율이 41.3%에 달했다. 차별 경험을 한 여학생이 모두 성별에 의한 차별을 경험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학내 차별을 경험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인권침해에 침묵해야 하고, 바꿀 수 없는 현실

위와 같은 인권침해가 학교에서 일어났을 때 주로 어떻게 해결하나요?						
담임 등 교사에게 건의한다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한다	학급회의, 학생회,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건의한다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에 신고한다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테니까 참거나 모르 체 한다	방법을 몰라 해결할 기회를 놓치곤 했다	총계
빈도	369	374	105	147	1012	354
백분율	15.6%	15.8%	4.4%	6.2%	42.9%	15%

응답자들에게 위와 같은 인권침해가 학교에서 일어났을 때 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물었다. 다수의 학생들이 교사에 의한 체벌과 폭언을 비롯해 두발복장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단속과 압수, 정규교과 외 학습의 강요 등의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으나, 인권침해에 제대로 대응하여 해결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테니까 참는다’는 응답이 42.9%로 가장 높았다. ‘방법을 몰라 해결할 기회를 놓친다’는 응답도 15%에 달해, 과반 이상의 청소년이 인권침해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교사에게 건의’는 15.6%, ‘부모에게 도움 요청’ 15.8% 등으로 소극적인 대응마저 비교적 소수의 학생만이 하고 있으며, ‘학생회 등을 통해 건의’ 및 ‘교육청 등 기관에 신고’와 같은 주체적 대처는 각각 4.4%, 6.2%로 더욱 적게 나타났다. 학생회와 교육청 등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신뢰가 적거나, 접근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1년간 생활규정, 급식, 학교일정 등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문제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적 있나요?					
	잘 반영된다	조금 반영된다	거의 무시된다	아예 무시된다	총계
빈도	288	1016	767	297	2370
백분율	12.2%	42.9%	32.4%	12.5%	100%

또한 응답자 중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다는 응답은 1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무시된다’와 ‘아예 무시된다’를 합하면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무시당한다는 응답은 44.9%에 달했다. 학교 안의 민주주의가 열악한 현주소를 보여 주는 수치이며, 학생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생활을 개선하거나 인권침해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

한국 사회, 청소년에 대한 무시, 폭력 등 많아

최근 1년간 체벌이나 폭행,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 사람이 있나요? (복수 응답)

※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 수는 2255명

	교사 및 교직원	학원 강사	부모/ 보호자	동급생/ 선후배	경찰	낯선 사람	전혀 없다
빈도	763	189	311	476	24	276	1066
응답자중 백분율	33.8%	8.4%	13.8%	21.1%	1.1%	12.2%	47.3%

응답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겪은 폭행 및 언어폭력 등의 폭력 가해자 유형을 물었을 때,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47.3%(1066명)은 '전혀 없다'고 답하였다. 폭행 및 언어폭력의 가해자로는 응답자 중 33.8%가 '교사 및 학교직원'을 꼽아 1위로 나타났다. '동급생 및 선후배'가 가해자인 폭력을 경험했다는 것은 응답자 중 21.1%였다. 폭력이 정도나 유형 등은 알 수 없지만, 학생 간의 폭력 만큼이나 교직원에 의한 폭력 문제도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함을 보여 준다.

폭력 가해자로 '보호자(부모 등)'를 꼽은 것은 응답자 중 13.8%, '낯선 사람'인 경우가 12.2%, '학원 강사'인 경우가 8.4%였으며, 심지어 '경찰'인 경우도 1.1%로 존재하였다. 상당수의 청소년이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드러내는 조사 결과이다.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청소년의 삶의 현실과 현재 사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청소년 참정권에 관련된 인식을 질문하였다.

학교생활이나 청소년인권에 관한 다음 문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252	625	818	670	2365
백분율	10.7%	26.4%	34.6%	28.3%	100%

응답자 중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는 문장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고 답한 것은 10.7%, '조금 그렇다'고 답한 것은 26.4%로, 3명 중 1명 이상이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응답했다.

학교생활이나 청소년인권에 관한 다음 문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학교 종류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국공립	빈도	140	424	572	517	1653
	백분율	8.5%	25.7%	34.6%	31.3%	100.0%
사립	빈도	81	187	232	146	646
	백분율	12.5%	28.9%	35.9%	22.6%	10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빈도	28	7	5	3	43
	백분율	65.1%	16.3%	11.6%	7.0%	100.0%

학교생활이나 청소년인권에 관한 다음 문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성별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남성	빈도	61	171	302	334	868
	백분율	7.0%	19.7%	34.8%	38.5%	100.0%
여성	빈도	171	435	506	335	1447
	백분율	11.8%	30.1%	35.0%	23.2%	100.0%
기타	빈도	20	12	5	0	37
	백분율	54.1%	32.4%	13.5%	0.0%	100.0%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국공립학교에 다닌다는 응답자는 34.2%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응답자는 41.4%가 그렇다고 답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컸다. 남성은 26.7%, 여성은 41.9%, 기타 성별은 86.5%가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는 문장에 대해 긍정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학교생활이나 청소년인권에 관한 다음 문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 학교 규칙 또는 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578	699	616	469	2362
백분율		24.5%	29.6%	26.1%	19.9%	100%

학교 규칙과 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응답자도 54.1%에 달했다. 학교 생활 규정과 생활지도 등이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조사 결과이며, 과연 불가피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만하다.

학교생활이나 청소년인권에 관한 다음 문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 학교 규칙 또는 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학교 종류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국공립	빈도	360	468	455	370	1653
	백분율	21.8%	28.3%	27.5%	22.4%	100.0%
사립	빈도	186	218	148	91	643
	백분율	28.9%	33.9%	23.0%	14.2%	10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빈도	28	9	2	4	43
	백분율	65.1%	20.9%	4.7%	9.3%	100.0%

이 역시, 국공립학교에 다닌다는 응답자는 50.1%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고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응답자는 62.8%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하여 10%p 이상 차이가 났다. 전반적으로 학교 규칙이나 생활지도가 사립학교는 그 정도가 좀 더 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교생활이나 청소년인권에 관한 다음 문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 학교와 교사가 학생을 존중해주면, 학생도 교사를 존중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1308	688	236	128	2361
백분율		55.4%	29.1%	10%	5.4%	100%

학교와 교사가 학생을 존중해줄 때 학생도 교사를 존중한다는 문장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55.4%이고, ‘조금 그렇다’는 응답을 합산하면 84.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주면 교사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일부의 논리와는 다르게, 다수의 청소년들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존중이 상호적으로 일어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이나 청소년인권에 관한 다음 문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 교사 등 어른에게 의견을 말할 때 혼나거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645	797	540	374	2356
백분율	27.4%	33.8%	22.9%	15.9%	100%

응답자 중에서는 어른에게 의견을 말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는 문장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1.2%에 달했다.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5.9%에 불과하였다.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에 위축되어 있고, 참여와 의견 표현에 대해 두려움을 학습하고 있다는 우려가 드는 조사 결과이다.

학교생활이나 청소년인권에 관한 다음 문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 한국은 청소년에 대한 무시, 차별, 폭력 등이 많은 사회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783	825	527	227	2362
백분율	33.1%	34.9%	22.3%	9.6%	100%

68.1%의 응답자가 한국 사회에 대해 ‘청소년에 대한 무시, 차별, 폭력이 많은 사회’라고 평가하였다.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가 33.1%에 이르러서, 3명 중 1명의 청소년은 한국은 청소년에 대한 무시, 차별 폭력 등이 많다는 것을 강하게 긍정하고 있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9.6%에 불과했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와 인권 현실에 대해서 다시 돌아봐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학교생활이나 청소년인권에 관한 다음 문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도움을 요청할 기관이 있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338	698	952	372	2360
백분율	14.3%	29.6%	40.3%	15.8%	100%

‘내가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기관이 있다’는 응답자는 43.9%에 불과해, 2명 중 1명 이상은 인권침해를 당해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4.3%에 불과했다. 이는 다른 문항의 조사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 안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참거나 대응 방법을 몰라서 대처하지 못한다고 한 것과도 일치하는 조사 결과이다.

학교생활이나 청소년인권에 관한 다음 문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 등)이 있다면 교육 정책이나
 청소년 정책이 많이 바뀔 것이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1084	815	330	131	2360
백분율	45.9%	34.5%	14%	5.6%	100%

80.4%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될시 교육 및 청소년 정책의 변화가 예견된다고 응답했다. 청소년이 '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외면하는 기존 정당 및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는 인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만큼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를 통해서 교육 정책이나 청소년 정책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학교생활이나 청소년인권에 관한 다음 문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 나에게 선거권이 있다면 사회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1257	733	260	108	2358
백분율	53.3%	31.1%	11%	4.6%	100%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 요구에 대해, 상당수는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반대한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53.3%로 과반수는 자신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한 자신의 관심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문장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조금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를 합산하면 84.4%에 이른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6%에 불과했다. 즉 현재 청소년의 정치적 무관심은,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고 정치에 참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생활이나 청소년인권에 관한 다음 문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 청소년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1458	674	141	80	2354
백분율	61.9%	28.6%	6%	3.4%	100%

61.9%의 응답자는 청소년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긍정하였다. 90.5%의 청소년이 '청소년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문장에 동의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4%에 불과했다. 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법의 필요성을 청소년들이 크게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다.

학교 밖에서도 인권을 짓밟히는 청소년의 삶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현장실습(도제학교 포함), 청소년인턴십 등을 나간 경험이 있나요?			
	있다	없다	총계
빈도	395	2004	2399
백분율	16.5%	83.5%	100%

전체 응답자 중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나 현장실습, 청소년인턴십 등 임금 노동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은 395명으로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16.5%였다.

노동 경험이 있다면, 일터에서 경험한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임금체불(임금을 제때 안 주거나 적게 주거나 휴일 수당 미지급)	일터에서의 폭행, 폭언, 기합(얼차려)	성희롱, 성폭력	업무 때문에 다치거나 몸이 상함
빈도	139	98	99	147
응답자 중 백분율	35.2%	24.8%	25.1%	37.2%
	직장에서의 벌금(지각이나 실수를 이유로 벌금 요구)	사전예고나 해고수당 없는 갑작스러운 해고	일방적인 노동시간, 노동조건 변경 통보	
빈도	85	96	120	
응답자 중 백분율	21.5%	24.3%	30.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 (※2016년 시급 6030원, 2017년 시급 6470원)	기타	
빈도	201	124	82	
응답자 중 백분율	50.9%	31.4%	20.8%	

이들 중 22.0%(87명)는 임금 체불 등 제시한 노동 관련 인권침해들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지 않았다.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은 무려 78.0%(308명)에 이르러, 임금 노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 경험을 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노동 중 인권침해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50.9%), ‘업무 때문에 다치거나 몸이 상함’(37.2%), ‘임금체불[임금을 제때 안 주거나 적게 주거나 휴일수당 미지급]’(35.2%),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31.4%), ‘일방적인 노동시간, 노동조건 변경 통보’(30.4%) 등의 순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 “차별 대우”, “직장 내 왕따” 등이 있었다. 청소년 노동의 현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조사 결과이다.

최근 1년간 청소년쉼터나 꿈드림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안학교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나요?			
	있다	없다	총계
빈도	144	2241	2385
백분율	5.9%	92.1%	100%

전체 응답자 중 최근 1년간 청소년쉼터나 꿈드림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안학교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은 144명으로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6.0%였다.

위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이용과정에서 경험한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부당한 이용 거부(이용자의 정체성이나 행적을 이유로 한 경우 등)	시설에서의 폭행, 폭언, 기합(얼차려)	성희롱, 성폭력	머리카락, 옷, 화장 등에 대한 규제와 단속
빈도	46	44	44	61
응답자 중 백분율	31.9%	30.6%	30.6%	42.4%
	휴대전화 이용이나 연락에 대한 규제와 단속	차별적 발언이나 대우	개인정보 유출	기타
빈도	65	62	50	45
응답자 중 백분율	45.1%	43.1%	34.7%	31.3%

이들 중 31.9%(46명)는 부당한 이용 거부 등 제시한 인권침해들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지 않았고 68.1%(98명)은 제시한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수가 적어서 일반화하기 어려우나, 쉼터 등의 시설에서도 청소년인권침해 문제가 널리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응답자들이 많이 경험한 인권침해로는 ‘휴대전화 이용이나 연락에 대한 규제와 단속’(45.1%), ‘머리카락, 옷, 화장 등에 대한 규제와 단속’(42.4%) ‘차별적 발언이나 대우’(43.1%), ‘개인정보 유출’(34.7%) 등이 많았고 폭행과 폭언 등 폭력(30.6%) 및 성희롱 등 성폭력(30.7%)을 경험한 경우도 30%가 넘고, 정체성이나 행적 등을 이유로 이용을 거부당한 경우(31.9%) 및 개인정보 유출(34.7%)을 경험한 경우도 3명 중 1명 꼴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성적 미달시 압박’, ‘초면에 반말을 하고 무시’ 등이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이나 거리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도 청소년인권 침해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별첨자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개

1. 제정연대 소개

1) 결성 취지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함께 외쳤던 청소년들을 기억한다.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정치에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왜 아직도 시민이 아닌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묻는다.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은 대체 어디에 있나요?”

“청소년 정책은 왜 다들 통제 중심인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교육에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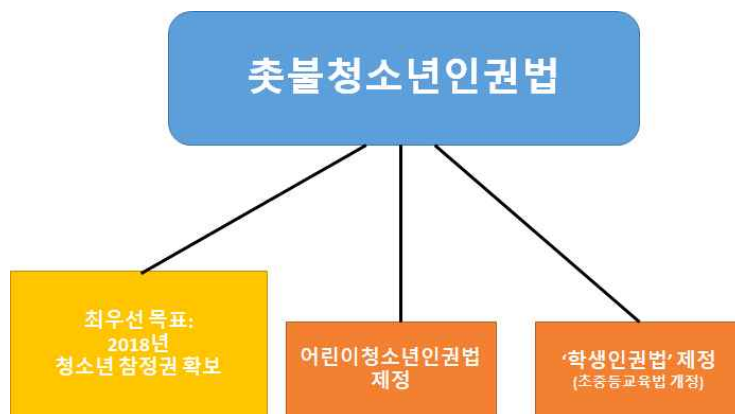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학교입니까?”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다는 ‘촛불’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난 지금에도 학교에는 왜 인권과 민주주의를 찾아보기 힘든가요?”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는 지역의 학생은 인간도 아닌가요?”

촛불청소년의 물음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답할 때이다. 이를 위해 전국 각지의 단체들과 청소년들이 모여 2017년 9월 26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결성했다.

2) 주요 목표



“2018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들자!” “청소년인권, 이제는 국회가 답하라!”

청소년, 입시공부가 아닌 정치를 통해 삶을 바꾸자

청소년에게 선거권·피선거권·정치표현의 자유·정당활동의 권리·주민발의권을 보장하라

만18세는 너무 늦다, 청소년을 유권자로

선거/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18세 미만으로 하향하라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꼴찌에서 벗어나자

어린이·청소년 인권목록과 인권보장체계를 담은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학교는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학생인권침해행위 명시,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교육청에 권리회복기구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

3) 왜 ‘촛불청소년인권법’ 이라 부르나?

- ‘광장의 시민’, ‘광장의 동료’ 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을 기억한다.
- 청소년 인권을 억압하고 청소년을 시민에서 배제해온 현실도 청산되어야 할 ‘적폐’ 이다.
- 청소년 참정권을 비롯한 청소년 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일부 청소년의 폭력사건이 청소년인권을 유보할 이유가 될 수 없다..
- 촛불에 함께했고 촛불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촛불에 함께했던 청소년들의 외침에 ‘촛불 청소년인권법’ 으로 답해야 할 때이다.

2. 촛불청소년인권법의 구체적 내용

1)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Ⅲ 문제점

- 촛불의 힘으로 바뀐 정권 하에서도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은 투표조차 할 수 없다.
- 세계 대다수 나라가 18세 투표권을 선택했고, 더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16세까지 참정권을 보장한 정치선진국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후진적이다.
- 만18세 투표권을 공약한 정권이 들어섰지만, 정치적 거래로 그조차도 차일피일 미뤄질 우려가 있다.
- 만18세로 투표연령이 낮아져도 청소년의 극히 일부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만18세는 너무 늦다.
- 청소년 참정권이 없기에 정치인들이 청소년 인권에 무관심하다.

- 청소년이 정치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모이고 정당활동에 참여할 당연한 권리가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다.

Ⅵ 우리의 목표

-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는 나라, 청소년 정치인이 있는 나라, 청소년도 자기 삶에 필요한 법을 발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 입시공부가 아니라 정치를 통해 삶을 바꿀 기회가 청소년에게 주어져야 한다. 청소년 시기는 민주주의를 단지 훈련하는 나이가 아니다.
- 만18세 너무 늦다. 선거연령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역량을 보여준다. 만18세 투표권을 넘어 더 많은 참정권을 확보한다.
- 청소년이 비청소년에 의해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대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 2018년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든다.

Ⅶ 우리의 요구

- 청소년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할 권리,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선거법, 정당법을 개정하라!
- 선거권/피선거권/주민발의/주민투표 연령을 만18세보다 더 낮추어 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주민투표법을 개정하라!

2)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Ⅵ 문제점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 학교, 학원, 복지시설, 쉼터, 알바현장, 지역사회 등에서 학대, 성폭력, 착취, 모욕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 보호막은 취약하다.
- 어린이·청소년의 학습시간은 OECD 국가 중 최장시간으로 학대수준이다. 놀 권리, 쉼 권리, 사회에 관심을 갖고 행동할 권리,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빼앗기고 있다.
- 기존 법률은 청소년에 대한 통제 위주의 내용만 담고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가입·비준(1991년)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삶을 관통하는 통합법 하나 없다. 담당부처가 산재해 있어 통합적 정책이 부재하다.

Ⅶ 우리의 목표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꼴찌에서 벗어나자.
-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사회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지지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어린이·청소년 인권법이 있는 나라, 어린이·청소년 관련 법과 정책의 기본이 인권이 되는 나라를 만든다.
- 어린이·청소년 내부의 차이에 주목하고, 소수자인 어린이·청소년이 차별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한다.
- 문재인 정부의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공약이 헛된 약속이나 허울뿐인 약속이 되지 않도록 만든다.

Ⅵ 우리의 요구

-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하라!
- 어린이·청소년의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인권 목록을 밝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라!
- 폭력, 착취, 차별로 고통받는 소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 보호자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난민청소년, 청소년 알바노동자, 시설거주 청소년 등
- 인권보장체계를 포함한 실효성있는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 핵심부처 지정,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 의무, 인권영향평가 도입, 권리회복기구 설치, 피해자 지원책 등

3) 학생인권법

Ⅵ 문제점

- 현장실습생의 자살, 여학생 성폭력, 교사에 의한 학대·폭행, 과도한 복장·소지품 단속, 촛불집회 참여 제지, 보충·야자 강요 등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 학생회의 법적 지위가 허약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는 참여조차 할 수 없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단 네 곳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학생인권 수준이 더욱 열악하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도 조례의 법적 지위가 약하다 보니 위반하는 학교들이 많다.
- 학생·청소년 인권에 반대하는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지방의회와 교육청으로 인해 학생인권조례,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등 인권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가로막히고 있다.

Ⅵ 우리의 목표

-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학생을 존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대접하는 학교를 만든다.
- 우리에게서 민주공화국의 학교가 필요하다. 학생에게 시민권을 보장하자.
-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인권법률로!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학생이 인권을 누리고 인권의 가치를 익힐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든다.
-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인권 공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힘쓴다.

Ⅵ 우리의 요구

- 학생인권 목록 및 학생인권 침해행위를 법률에 명시하라! : 체벌, 두발복장검사, 소지품검사, 차별행위, 보충학습강요, 서약 강요 등
- 학교운영 및 학칙 제·개정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라! :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 제도 마련,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위원 참가, 학칙 제·개정시 학생총회 동의절차 명시
- 모든 교육청에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회복기구와 절차를 마련하라! :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 설치, 구제절차 명시 등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참여단체(2017.10.20 현재 300개 단체. 굵은 표시한 곳은 연대체)

강원학교인권교육연구회/ **경남교육연대**(거제교육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참교육동지회, 김해교육연대, 마산YMCA, 민주노총경남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경남지부, 전국교수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 전교조 경남지부,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경남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진주교육사랑방,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경남청소년네트워크**(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밀양지부, 청소년바보회)/ **경북교육연대**(경북장애인부모회, 경북혁신연구소 공감, 노동당 경북도당, 녹색당 경북도당,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중연합당 경북도당, 전농경북도연맹, 전교조경북지부, 전국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 전국교수노조 대경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전국대학노조 대경지부,

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 정의당경북도당,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공동체 벗/ 광주인권지기 활짝/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교수노조대전충남지부, 대전YMCA,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학부모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대전지부, 양심과인권-나무, 여성인권티움, 전교조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 투명가방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교육청소년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대전지부, 전북지부)/ 민주청소년연대/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랑/ 부천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 세움/ 사단법인 두루/ 사)들꽃청소년세상/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서울교육단체협의회**(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노원도봉교육공동체, 사학올바로세우려는시민모임,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크레파스원정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어린이문화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 청소년 첫걸음/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이리여고 인권동아리 마중물/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책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교조 강원지부/ 전교조 경기지부/ 전교조 대구지부/ 전교조 세종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전교조 전북지부/ 전교조 전남지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 전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 전북교육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인권교육연구회**/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정의당예비당원협의회 '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고양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양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구미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김제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김포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김해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나주시회**/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마창진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목포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상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남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동북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서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성남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수원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안양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영암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의왕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전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정읍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회**/ **참교육학부모회 천안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파주시회**/ **참교육학부모회 포항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홍성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화순지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좌파**/ **청년참여연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밍동**/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페미니즘모임/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강원연대**(강릉시민행동, 강원영동학교인권교육연구회, 공공운수노조 금강고속지회, 내일을여는속초시민연대, 노동당 강원도당, 동해시민공동행동모임, 민주노총 강릉일반노동조합, 민주노총 강릉지역지부,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삼표지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 동삼지부, 민주노총 동해삼척지부, 민주노총 속초고성양양지역지부, 민주노총 속초지역지부,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민주노총 속초지역지부, 속초경제정의실천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 인제군 설악산배움터, 전교조 강원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도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속초시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홍천지회, 전국농민회 강원도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속초지부, 전국민주일반연맹, 전국보건의료노조 속초의료원지부,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정의당 강원도당, 청소년의 행동하는 양심, 춘천시민연대, 춘천평화나비,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강원학부모회, 흥천골포장 대책위, 흥천군 농민회, 흥천군 시민사회연석회의, 흥천군 여성농민회)/ **촛불청소년인권법부산제정연대**(꽃길메이커, 나래(은새미학교, 우다다학교, 참빛학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청소년겨레하나, 금샘마을공동체, 나눔수레, 노동당 부산시당, 녹색당 부산시당, 맨발동무도서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민중당 부산시당, 부산다행복학교, 학부모네트워크, 부산민예총, 부산사회복지연대, 부산생활협동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인권상담센터,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교육을위한학부모연대, 부산참여자치연대, 부산학부모연대, 사단법인 열린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어린이책시민연대 부산울산지부, 정의당 부산시당,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창조어머니회, 책과아이들,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 살림, 햇살나무도서관, 희망세상)/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전교조 제주지부,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 참교육학부모회 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충남청소년인권+**(노동당 충남도당, 녹색당 충남도당, 민주노총충남세종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남도당, 서산인권모임 꿈틀, 아산시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아수나로 충남지부,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지부, 전교조충남지부, 전충남본부, 정의당 충남도당, 참교육학부모회 충남지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들,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충남지부, 청양시민연대, 흥성YMCA) / **충북교육연대**(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 노동당충북도당, 민족문제연구소충북지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충북지회, 민중연합당충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충북도당, 생태교육연구소 '터', 전국노동교육청본부충북교육청지부, 전교조충북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충북본부, 전국교수노동조합충북지부,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충북지부, 정의당충북도당,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장애인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피스모모(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인권행동**/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 양심**/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을만드는법**/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